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 정치부 · 사회부 · 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경기도협의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중앙) : 윤철한 기획연대국장(02-741-8565)  
담 당 : 경실련경기도협의회 : 유병욱 사무국장(031-253-2266)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김송원 사무처장, 남지연 사업간사(032-423-2950)  
제 목 : [공동성명] (총 5매)

보도일자 : 2023. 05. 22. (월) (배포 후 즉시)      배포일자 : 2023. 05. 22. (월)

##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 1. 윤 대통령은 공약이행 위해 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만들어야!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실에 맡겨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붙임자료 1)**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본 공약을 「17개 시·도,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하여 채택했다.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시도 공약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채택 시도 공약				
<p><b>4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b></p> <p>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p> <p><b>국민의힘이 약속합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주도 4차 합의에 대한 변경 협약</li> <li>▶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li> <li>▶ 경제자유구역 지정,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li> </ul>	<p>2022 지역균형발전 특위 업무보고 (붙임) 17개 시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p> <p><b>인천광역시</b></p> <table border="1"> <thead> <tr> <th>7대 공약</th> <th>15대 정책과제</th> </tr> </thead> <tbody> <tr> <td>IV.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td> <td>11.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등 매립지 문제 해결</td> </tr> </tbody> </table>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IV.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11.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등 매립지 문제 해결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IV.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11.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등 매립지 문제 해결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인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전담할 기구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총리실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이견과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환경부를 대신할 것이란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조속히 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 2. 환경부는 윤 대통령 공약의 이행일정에 맞춰 '4자 합의'도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공약했다. 다름 아닌, 서울·경기·인천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임기 내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동안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2015. 6.28)에 따라 '선제적 조치' 이행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수도권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풀게 되면 자연스럽게 4자 합의 속 '선제적 조치' 이행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게 된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 內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을 위한 '4자'의 역할 규정

4자 협의체 회의안건 ②

###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

1.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 만 $m^2$ )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3개 시·도가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하여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 만 $m^2$ )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

이에 환경부는 '선제적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直)매립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대체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4자 합의도 대통령 공약 이행 로드맵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결국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면 연이은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는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속 선제적 조치 이행을,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지난기간 환경 피해를 받아온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 3. 경실련은 '전국경실련 인천선언'에 의거 대통령 공약 이행촉구 운동 펼칠 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월 24일(금), 인천에서 개최한 '경실련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을 발표했다. 중앙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4대 개혁과제'를 선언했고, 네 번째 환경정의 과제로 '자원 순환정책 실현 및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이행'을 선언했다.(**붙임자료 2**) 이어서 전국경실련은 "오늘의 인천 선언을 시발로 전국적인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에 경실련은 <전국경실련 인천선언>에 의거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이행'을 환경부와 3개 시·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대통령 공약 및 4자 합의' 이행 촉구 범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전국경실련 인천선언' 4대 개혁과제 中 네 번째 '환경정의' 개혁과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관련기사

▲ **윤석열, “수도권 매립지 임기 내 반드시 이전...대체 매립지 확보할 것”**

(인천일보, 2022.01.10 게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629>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연수구 송도동 웨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열린 '제 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 참석해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0일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웨라톤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15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고,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붙임자료 2. '전국경실련 인천선언' 4대 개혁과제 中 네 번째 '환경정의' 개혁과제

▲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 발표 (2023. 2.24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강당)

##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

중앙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은 '경실련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인천에서 오늘, 경제정의사회정의를 향한 2만여 회원의 실천 의지를 모아 <선거제도와 의료 개혁,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전국경실련 인천 선언'>을 다짐한다.

...

이에 전국경실련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함을 통감하고, 정치개혁·의료개혁·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선언한다.

...

넷째, 환경정의 과제로 '자원순환정책 실현 및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이행'을 선언한다.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한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매립지 등과 관련된 정책이 정치권의 선거 도구로 전락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련 행정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경우 2015년에 체결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서'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 이의 실행을 위한 정부 부처의 중심적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경실련은 오늘의 인천 선언을 시발로 전국적인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23년 2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